

# 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 보호자 70% "부담 줄었다"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보호자 70%가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복지서비스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방향 및 추진 현황'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이러한 효과성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이숙란 복지부 제1차관과 관계 전문가, 지자체, 제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석했다.

'통합돌봄'은 장애·질병·사고 등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 지자체가 중심이 돼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시범 사업으로 도입돼 작년 관련 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영진 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이 통합돌봄 정책 방향과 그간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 참여군의 69.8%가 부양부담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입원율은 5.2%로 입원 가능성이 61% 줄었다. 요양시설 입소율 또한 1.8%로 87% 감소했다.

정부는 본사업에서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통합돌봄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애인의 경우 65세



통합돌봄 전담창구 안내내부.

##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 요양병원 입원율·요양시설 입소율은 감소 본사업,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대상 확대

이상(146만명)과 65세 미만 중증 지적·뇌병변 장애인이,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 관리자 8만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군구는 통합지원회의, 모니터링 등 케어매니지먼트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읍면동은 신청·발굴, 조사 담당 게이 트웨이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지자체 전

담 조직 설치와 전담 인력도 확충한다.

이러 김대삼 광주광역시 서비스원장이 지역의 우수 사례인 광주시 공공 돌봄 시스템 '광주다움통합돌봄'을 소개했다. 김 원장은 누락 없는 기존 돌봄 연계와 광주+돌봄 13대 서비스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는 성과를 제시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

명했다. 이 차관은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돼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중앙사회복지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는 "중앙과 시·도 사회복지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문 기관으로서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과 정부를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오권철 기자

## "상반기만 교사 교육침해 58건"

전남도교육청, 교권 보호 체계 손본다

전남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교사 교육활동 침해가 58건 발생하자, 도교육청이 교보위 교사 참여 확대와 법률·심리 지원 확충 등 교권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교사 위원 20% 이상 확대,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 발간, 교육활동 보호 관리자 책임제, 교육활동 침해, 교직 스트레스 교원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교보위의 교사 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해 22개 교육지원청에 교사위원을 전체 위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안내한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 비율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된다.

또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는 교사가 아닌 관리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꾸준히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강화·보완하며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을 발간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담변호사 자문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교원 뿐 아니라 교직 스트레스 교원의 심리 상담을 확대,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가 아동학대 신고와 얽히면서 교사들이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전남도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3년 179건, 지난해 87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58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심리 상담 건수는 2023년 348건에서 지난해 2479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도 942건이 접수됐다.

김광식 도교육청 민주시생활교육과장은 "어려운 학교 현장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고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교육공동체가 서로 소통과 존중을 통해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성호 기자

## '학부모에 뒷돈·선수에 폭행' 광주 초교 야구감독 실행 법정구속

진학 또는 주전 보장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기고 훈육을 빌미로 학대까지 일삼는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 대해 실행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채탁금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추징금 5890여 만원도 명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자신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 선수 부모들로부터 중학교 야구부 진학 정보 전달 또는 출전 기회 보장 등 각종 명목으로 심수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감독이면서 도 훈련 과정에 어린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욕설·폭언을 일삼아 아동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5-6학년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해야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아이가 주전 선수로 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이른바 '뒷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훈련비, 스승의날,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코치들에게 지급했고, 개인레슨비 역시 지도의 정당한 대가였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법정 증거 등으로 미뤄볼 때 A씨가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을 일부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코치들에게 지급한 돈에 불과하다. 개인 레슨 역시 실제 진행된 레슨의 대가가 아닌 후원, 증여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받은 총 금액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받은 금품 역시 반환하지 않았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역시 피해자의 취약성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실행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송현근 기자

## '7명 사상' 아이파크 사고 책임자 항소심, 붕괴원인 감정 재의뢰

항소심 재판부 첫 공판서 감정 신청 수용... 전문가 촉탁 감정 거쳐 법률적 판단 방침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7명이 사소한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내 붕괴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사·감리업체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 감정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아이파크 시공사 현산, 타설 하청업체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산 전 대표 등 각 업체 별 임직원 17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인 39층 타설 과정에서 발생한 16

개 층 연쇄 붕괴사고를 내 하청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이들은 현산의 현장 총 책임자 이모(53) 전 소장은 징역 4년을, 2단지 공공 관련 직급별 책임자 2명에게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관련 직원 2명에게는 과실책 정도와 역할 등에 비춰 징역 2년~2년6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에서는 현장소장, 시공 책임자에게 각 징역 3~4년을, 실무자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감리업체 '광장' 소속 현장 감리, 총괄 감리 등 3명에게는 징역 1~3년,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산 전 대표이사과 전 건설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

별로는 현대산업개발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가현 벌금 3억원, 감리업체 벌금 1억원이 각 선고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검찰과 이들의 쌍방 항소로 열린 1심 선고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 열렸다.

재판에서 현산을 비롯한 피고인 측은 각기 '유사 사고와의 처벌 형평을 고려해 달라',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지지대 무단 설치 사실 등을 몰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사는 "원청과 하청사 경연성, 작업체 안전 담당자·감리 등에게 사고 방지 관련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범이 있다"면서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데도 서로 책임을 전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청사 가현건설 측은 '1심 과정에서 거짓 증인을 밝혀낸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졌다' 등의 이유로 들어 사실조치·증인 신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사고 원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의 전문 감정이 필요하다는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보고 법률적 판단을 하면 될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든 감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직권으로 관련 직능단체 또는 학회 등 중 1곳에 감정 촉탁을 맡기로 했다. 검사는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할 사건의 실체를 통해서 살피다 보면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무죄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전략은 아닌지 우려한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재판부에 협조하겠다"며 감정신청을 수용했다.

/전민규 기자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